

“정가제 폐지되면 출판산업 왜곡된다”

정가제 폐지는 결국 ‘책의 죽음’ 몰고 와…

사회적으로 ‘책은 다르다’는 인식 뿌리내려야

김중수 | (재)한국출판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도서출판 한울 대표

인터넷 서점의 할인공세와 이에 대한 대형서점의 반발로 표면화된 정가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출판계가 일관되게 정가제 고수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책은 다르다’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이다. 일반상품과 달리 책의 할인판매가 허용될 경우 우리 출판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 확실하다. 일시적으로 정가제를 폐지했던 프랑스 출판계가 겪어야 했던 ‘홍역’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도서정가제 문제가 출판계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인터넷 서점의 할인공세와 이에 대한 대형서점의 반발로 표면화된 정가제 문제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것이다. 지난 10월 13일 한국출판연구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는 출판계 입장이 설득력 있게 펼쳐졌다. 하지만 그 이전의 여러 공청회에서 각계의 대표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일반 대중들은 대부분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격 할인이 좋다는 쪽에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사회에서 도서정가제가 200여년간 유지돼온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도서정가제를 한때 폐지했다가 그 폐해 때문에 원상복귀시키는 골절 끝에 결국 법원 · 의회 · 정부의 지지 아래 정가제를 국가정책으로 계속 유지해왔다. 그 과정에서 “책은 (다른 상품과) 다르다”는 관점이 나오기도 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유럽에서 정가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우리와 맞지 않다는 것이 확인될 때 비로소 도서정가제 폐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전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도서정가제

일단 지난 13일의 포럼에서 다행스러웠던 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와 달리 처음으로 ‘책은 다르다’는 입장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서정가제의 영역과 판매기간 등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의견도 2002년이 되면 ‘원론’ 상태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언제든지 사회적으로 도서정가제 문제가 제기될 때를 대비해 대중을 잘 설득해둬야만 한다. 우리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의 선진국들도 미국

에게서 정가제 폐지를 ‘권유’ 받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가능한 모든 것이 표준화해 가는 추세다. 도서정가가 더 이상 자국의 출판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판단 아래 몇년 전 정가제를 포기한 영국과, 정가의 규칙을 한번도 지켜보지 못한 채 유럽의 책을 무단 전제했던 미국의 출판산업이 지구촌 시대를 맞아 시장확장을 꾀할 것은 당연하다. 이는 비영어권 선진국인 프랑스와 독일에서 국가 차원에서 정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극적으로 대비된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인터넷서점도 기존 서점과 가격차이가 없다. 중소서점이 도서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이들 국가와 일본, 중국 등은 여전히 정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 한 도서가격을 영어권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실로 우리 출판계와 사회가 도서정가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 도서정가제에 대한 독일의 시각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다.

언어권 인구가 1억2천만명 정도인 독일은 미국보다 앞선 출판마케팅과 유통으로 미국시장에서조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영미권 평론가들도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 독일의 도서정가제는 1887년 출판서점협회의 주창으로 처음 도입돼 1888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몇몇 대도시에서 도서가격이 한 없이 곤두박질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진 정가제 규정은 지금까지도 아무 이의없이 유지되고 있다. 관련법인 <경쟁제한방지법 제6차 개정법>(1998)도 ‘출판물에 대한 가격 구속’만큼은 유일하게 계속 인정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연방하원(국회)이 교육정책 및 문화

정책적 이유에서 도서정가제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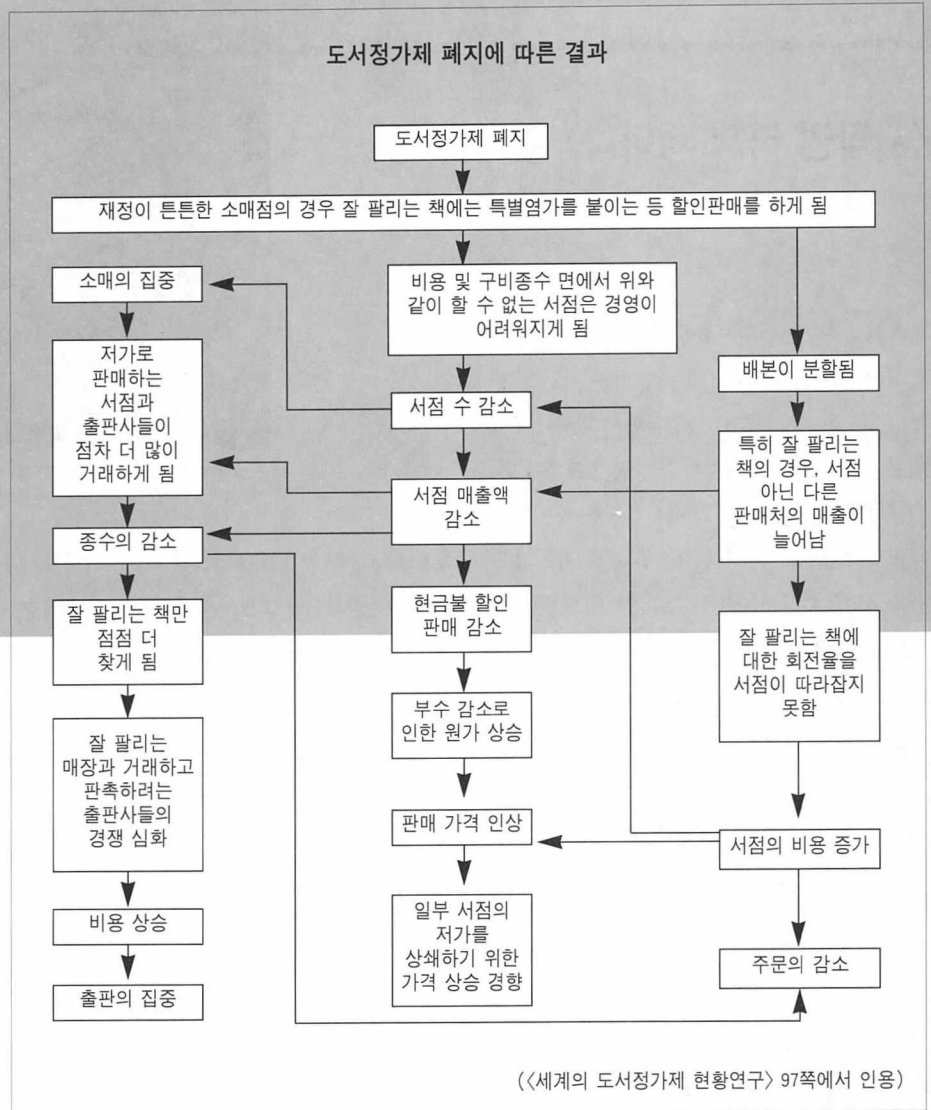
도서정가 규정이 없어질 경우 벌어질 최악의 사태는 미국과 프랑스의 예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자유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초(超)지역적 도서체인망이 등장하면서 중간규모의 서적거래상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됐다. 그 결과 도서정가제를 폐지한 첫 5년동안 도서가격은 62%나 상승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 공급되는 도서 종수는 1974년 이래 거의 정체돼 있는 상태다. 반면, 독일에서는 1974년과 1996년 사이에 도서 종수가 24만종에서 76만종 이상으로 3배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프랑스는 1970년대에 폐지한 도서정가제를 1981년 다시 법규로 부활시켰다.

도서정가제 폐지에 따른 문제

도서정가제 폐지에 따른 악영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출판사와 서점이 문을 닫게 되는 사태(실제 1984년 벨기에의 소매서점들이 잇따라 폐점했다)가 일어날 것이고, 그 여파는 결국 '책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당장은 도서 가격이 내려가 구매자들의 환영을 받기는 하겠지만, 1995년 도서정가제를 폐지한 영국의 예에서 보듯 서점에서 팔리는 책은 단지 베스트셀러에 국한될 것이다. 정가제 폐지 이후 기타 서적들의 평균가격은 상승했는데, 영국에서는 평균 7% 인상됐다.

자유시장의 돌풍에 내맡겨진 서점들은 단가를 낮추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고객들 역시 할인요구의 유혹을 받게 되며, 그 결과 여러 종의 도서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고, 소수의 최신 베스트셀러만 진열될 것이다. 서적거래의 주요 수입원은 베스트셀러로만 한정되고, 개인상담이나 24시간내 도서공급이라는 고품질 서비스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고객은 당장 베스트셀러를 구입할 때는 돈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돈은 비(非)베스트셀러를 구입할 때 지불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가제 폐지에 따른 혼란으로 발생한 구조적 비용도 궁극적으로는 독자가 지불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위원회는 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타협안을 내놨다. 문화적 가치가 높은 도



서일 경우 출판 후 1년 동안 정가판매하고, 그렇지 못한 도서들은 자유가격 판매를 실시하는 것이 그 하나다. 그러나 독일 출판서점협회는 이안을 거부했다. 문화적 가치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유럽의 문화적 전통에 어긋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을 위한 도서가격 인하, 스웨덴의 경우처럼 '문학작품을 위한 기금 조성'이라는 브뤼셀의 또 다른 타협안도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런 방안에는 결국 자유경쟁을 위반하는 관료주의적 간섭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완전경쟁을 저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브뤼셀 유럽연합위원회는 1999년 7월 14일 오랜 토론 끝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2개국간의 (공동)도서정가제 폐지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앞에서 살펴본 유럽의 예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소량출판을 가능케 해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생활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준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수많은 케이블 TV, 〈스타워즈〉 류의 영화, 인터넷, PC게임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독서대중에게 책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책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일이다.

프랑스 정부가 작성한 '도서정가제 폐지에 따른 결과'를 정리한 표를 참고로 제시하며, 도서정가제의 폐지가 출판산업 발전을 왜곡시킬 것이 분명함을 지적해둔다.●